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완료 ('15.8.27)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2015. 8. 27.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제재제도의 현황 및 평가	2
① 제재제도 현황	2
② 평 가	5
III. 제재개혁 추진방안	7
①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9
②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13
③ 금전제재 활성화	16
④ 제재시스템 개선	32
IV. 향후 추진계획	37
참고 1.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효과 관련 가상사례 구성	38
참고 2. 국가별 주요 금전제재 부과사례	48

I. 추진배경

- 그간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비판 제기
 - 감독당국이 직원까지 직접 제재하여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제약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행태를 유발하며,
 - 제재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 위반행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 반면, 최근 대형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금전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음
 - 기관제재가 주의·경고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고,
 - 금전제재 수준도 선진국 사례나 국내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응하여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
 - 직원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 처리하고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경영진에 대한 제재, 금전제재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

⇒ 이러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기관·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

II. 제재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제재제도 현황

(1) 제재 유형

□ 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② 금융기관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③ 금전제재로 구분

① (기관제재) 통상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업법
인가취소	인가취소	허가취소	인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지	기관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기관주의	주의	주의	주의

* 조치권자: 점선 위는 금융위, 점선 아래는 금감원

② (개인제재) 임원은 통상 해임,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 등,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로 구분

구분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업법
임원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직무정지
	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문책 경고 주의	문책 경고 주의	문책 경고 주의
직원	-	면직	-	면직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문책 경고 주의	문책 경고 주의	문책 경고 주의

* 조치권자: 점선 위는 금융위, 점선 아래는 금감원

※ 상기 제재를 받는 경우 부수적인 불이익효과 발생

- 대주주 적격 등 제한: 기관경고 이상 제재시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 제한(통상 3년)
- 임원 자격 제한: 해임요구·면직(5년), 직무정지·정직(4년), 문책경고·감봉(3년)
- 직원 승격·승급 제한: 정직(정직기간+18개월), 감봉(감봉기간+12월), 견책(6월)

③ (금전제재) 행정벌인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과 형벌인 벌금으로 구분되며 행정벌인 금전제재는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

① (과태료) 33개 법*에서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 491개 사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5백만원~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괄 규정

* 41개의 금융위 소관법 중 신보법, 농림수산업신용보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회계사법, 금융중심지법, 구조조정촉진법, 농어가목돈마련법(이상 8개법) 제외

② (과징금) 9개 법*에서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105개 사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회계사법, 신용정보법

** 통상적으로 위반 관련 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예: 초과신용공여액의 40% 이하 또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등)

③ (이행강제금) 5개 법*에서 보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금산법

**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주식의 장부가액에 0.03%를 곱한 금액 등

< 금전 제재간 비교 >

구분	과 징 금	과 태 료	이행강제금	벌 금
부과 목적	부당이익 환수, 영업정지 같음 등	경미한 질서 위반행위 제재	의무위반 상태에 대한 교정	실체적 범죄에 대한 금전벌
법적 성격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부과 주체	행정청	행정청, (이의제기시) 법원	행정청	사법당국
불복 절차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 제재 부과 현황

- ① **(개인제재)** 기관제재에 비해 개인제재 건수가 많고, 특히 임원에 비해 직원제재 건수가 많음

* '14년 제재(개인제재+기관제재) 1,247건 중 직원 제재가 약 74.3% 수준(927건)

- 직원제재는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 비중이 높음

* '14년 직원 제재 927건 중 주의·견책요구가 744건(약 80.3%)

- ② **(기관제재)** 제재 부과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경고·주의 이하의 경징계 위주로 부과

* '14년 기관제재 92건 중 경고·주의가 77건(약 83.7%)

구분	직 원			임 원			기 관		
	주의~ 견책	감봉~ 면직	계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해임권고	계	주의~ 경고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계
'12	726	237	963	193	156	349	78	8	86
'13	1,113	172	1,285	198	97	295	74	4	78
'14	744	183	927	167	61	228	77	15	92

- ③ **(금전제재)** 금전제재 부과금액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 과징금의 경우 '14년도 기준 1건당 평균 2.7억원(총 70건) 수준으로 타 부처*(공정위, 방통위)와 비교시 낮은 상황

* (공정위) 1건당 평균 71.2억원(총 113건) / (방통위) 1건당 평균 58.3억원(총 34건)

구 분	과 태 료 (단위 : 백만원)			과 징 금 (단위 : 억원)		
	개 인	기 관	계	개 인	기 관	계
'12	2.0 (681건)	14.0 (186건)	4.5 (867건)	0.3 (13건)	2.6 (69건)	2.2 (82건)
'13	3.4 (469건)	11.2 (332건)	6.6 (801건)	0.3 (2건)	3.7 (63건)	3.6 (65건)
'14	6.2 (494건)	12.3 (254건)	8.3 (748건)	1.9 (9건)	3.0 (61건)	2.7 (70건)

①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수적 행태 유발

- 감독당국이 직원까지 일일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 제기
 -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보신주의)를 유발하고 금융기관이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키울 수 없는 문제
- 제재시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 심화

② 기관제재는 주의·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효성 미흡

- 기관제재가 임직원 제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관주의·경고*가 대부분을 차지('14년 기준 83.7% 수준)

* 위반행위 발생시 기본적으로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고 기관제재는 요건 해당시 병과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합가중하지 않아 위반행위 수에 비례하여 제재가 상향되지 않는 문제

* 임직원 제재의 경우 경합가중제도가 이미 작동중

< 주요국 사례 >

- 미국, 독일 등의 경우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주로 기관에 대하여 제재
 - 특히, 임직원에 대한 직접제재 보다는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후 보고하는 방식이 활성화

< 주요국 감독당국의 제재건수 비교('13년) >

대 상		우리나라	미국(OCC)	영국(FCA)	독일(BaFin)	일본(금융청)
기관	비공식	-	46	미공표	116	미공표
	공식	78	75	8	42	52('12년)
개인	임원	295	149	41	20	-
	직원	1,285				

③ 금전제재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 미흡

-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부과금액이 주요국 사례 및 국내 타 영역에 비해 낮은 편
 - 금융법령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은 통상 막대한 반면, 제재 금액은 지나치게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짐
- 금전제재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및 징벌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부과금액 현실화와 부과대상 확대가 필요
 - 금전제재가 강화될 경우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 주요국 사례 >

- 주요국의 금전제재는 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제재금 부과
 - * (美 SEC) 도이치뱅크가 '08년 금융위기시 입은 손실을 숨긴 것에 대하여 \$5,500만의 과징금 부과('15)
 - * (英 FSA) Libor 금리조작과 관련하여 UBS에 대하여 £1.6억의 제재금 부과('12)

④ 내규·행정지도 위반도 제재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시정 유도 부족

- 법규 위반이 아닌 금융기관 내규 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
- 감독당국이 하나하나 지적·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시정하는 체제로 전환 필요

< 주요국 사례 >

- 양해각서 등 감독조치(행정지도)와 공식 제재수단을 순차·병행 활용
 - (1단계 자율시정) 금융기관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비공식적 감독조치(MOU)를 우선 활용하여 자율적 시정을 유도
 - (2단계 공식제재)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공식적 제재수단(업무개선명령, 임원 해임처분 등)을 활용

III. 제재개혁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

① **(개인제재)**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처리*
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

*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조치

○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관리·감독자인 임원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은 제고

② **(기관제재)**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

○ 기관주의·경고에 편향되었던 제재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③ **(금전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 부과대상도 확대

○ 이와 함께,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개선

④ **(제재시스템)**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

○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

〈 추진목표와 세부방안 〉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기관의 보수적 문화 혁신 및 자율성·책임성 제고

1.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 ① 자율처리 확대 및 사후관리 보완
- ② 임원에 대한 제재 합리화
- ③ 제재시효제도 도입

2. 기관제재 강화

- ①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 ② 경합가중제도 도입
- ③ 신규업무 진출 제한문제 개선

세부
추진방안

3. 금전제재 활성화

- ① 부과대상 확대
- ② 부과금액 현실화
- ③ 구체적인 부과기준 제시 등

4. 제재시스템 개선

- ① 내규 위반 등에 대한 제재관행 폐지
- ②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 ③ 확약서, 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등

현황 및
문제점

- 1.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의 운영으로 보수적 행태 유발
- 2. 기관제재는 주의·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효성 미흡
- 3. 금전제재 금액이 너무 낮아 징벌성·부당이득 환수효과 부족
- 4. 내규·행정지도 위반도 제재하고 금융기관 자율시정 유도 부족

(1) 「금융기관 자율처리제도」(舊 조치의뢰 제도) 확대 적용

□ (현 황) '14년부터 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토록 하고 있음

- 직원 자율처리 비율이 최근 증가하였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직원 자율처리 비율 : ('13년) 65.5% → ('14.11월 ~ '15.6월) 85.3% (+19.8%p)

※ 자율처리제도 적용대상 제한

- ① 견책 이하 경징계에만 적용
- ② 내부통제체제 구축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권역 제외
- ③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자인 직원도 직접조치

□ (개선방안) 직원 잘못에 대해서는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한다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 지속 확대(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필요)

① 견책 이하 → 감봉 이하 징계*에 대해 자율처리토록 확대

* '12~'14년 기준 감봉 이하의 징계는 전체 직원 제재의 93.7% 수준

** 단,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조치

-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면서 자율처리제도 추가 확대 적용

*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착근 추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함

②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자율처리를 허용하되,

- 감독당국이 임원을 제재한 후 해당 기관이 직원을 제재토록 하여 직원 제재가 부당하게 약화되는 것을 방지

- ③ 자율처리 미적용 권역(비지주계열 저축은행, 투자자문, 리스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자율처리 대상 확대 추진 계획(안) >

기 시행	1단계('15하반기)	2단계('16년)	3단계(중장기)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지주계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기시행+)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평가회사	(1단계+) 미도입 권역 중 자율처리 대상 회사의 자회사	전 권역 허용 및 금융기관별로 적용여부 판단

* 각 권역별로 특성에 따라 적용

(2) 자율처리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 (현 황) 직원 잘못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자율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

- (개선방안) 자율처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① 자율처리 결과 파악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는 보고받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 검사·제재규정 변경예고 완료(6.10 ~ 7.20)

- ② 자율처리의 적정성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경영 실태평가시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이행을 담보

* 금융기관 자율처리 관련 해당 금융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 및 관리 실태 점검 포함

- 자율처리 결과가 지속적으로 부적정한 금융기관은 자율처리 제도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외

* 과도하게 온정적으로 또는 가혹하게 조치하는 경우 등

(3) 임원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

□ **(현 황)** 임원 책임은 입증에 어려워 경징계 또는 면책되는 등 실무자에 비해 가볍게 제재되는 경향

- 제재대상 행위와 관련된 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예: 감독자-행위자)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 현행은 임원을 주로 감독자로 보아, 행위자에 비해 제재를 1~3단계 감경

- 검사결과 종전 기관 근무시 위반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검사 대상 기관 재임시 행위만 제재 가능 → 부적격자 배제에 한계

□ **(개선방안)** 위반행위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적극 규명함으로써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 부과

- ①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관련 자료 및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원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명

* 검사시 임원-실무자간 연락·면담기록, 경영진 지시 및 실무진 보고내역, 주변 임직원 진술, 유사 사례의 업무처리방식(전결권한) 등

-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행위자-관리자간 합리적인 기준 제시(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필요)

- 기관의 위반행위 관련 정도에 따라 임원 제재 적극 병행

- ②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의 복수 금융기관에 걸친 연속된 위반 행위를 합산하여 조치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 저하 방지

* 임원과 달리 직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므로 현 소속기관의 지휘통제권이 미치지 않았던 이전 근무기관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현 소속기관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 곤란

- ③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임권고시 '직무 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4) 제재시효제도 도입

□ (현 황) 금융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아주 오래된 행위도 제재 가능성에 노출되어 법적 안정성 저해
- 감독당국의 역량을 오래된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쏟는 비효율 발생

□ (개선방안) 금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도입범위) 금융위·금감원이 검사·제재권을 보유한 금융지주,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업권별 협회, 거래소, 예탁원, 캠코 등 금융공공기관을 포함

-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경과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도록 함

- 단, 각 법의 형벌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시효는 해당 조항 관련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장기로 운영

- 수사나 재판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

- 법 개정애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검사대상기간을 일정기간(5년) 이내로 운영하는 한편,

- 제재시효제도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고 금감원 검사·제재시 이를 존중

-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 제재시효제도는 행정청의 처분권한을 시간적 범위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서 처분권 수준의 법적 근거 필요

(1)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 **(현 황)** 기관제재가 임직원 제재에 비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재수준도 낮은 편**

○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시 기본적으로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고 기관제재는 **요건 해당시 병과***하는 방식으로 운영

*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 다수 점포가 관련되거나 조직적 위반인 경우, 임원이 주된 관련자인 경우, 집단 민원제기 또는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

○ 기관주의·경고가 기관제재의 약 **89.5% 수준**을 차지('12~'14년 기준)

□ **(개선방안)**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

○ 금융기관의 **관리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위반사항은 **개인제재 없이 기관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한 경우 이를 기관제재시 **양정에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필요)

* 예) 동일·유사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시행하는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운영

○ 위반행위가 **중대·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 **‘단기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

* 1개월 미만의 단기로 영업 일부를 정지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기관 평판 측면의 제재효과를 거두는 방식(일본 금융청 등이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거래자 피해·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2) 기관제재에 경합가중제도 도입

- **(현 황)** 금융기관이 다수의 기관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합가중하지 않아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제재가 상향되지 않고 있음

※ 임·직원 제재의 경우 경합가중제도를 이미 적용중

-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가중

- 다수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가장 중한 기관제재 1건으로 조치됨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 예) 기관경고 4건 → 기관경고, 기관경고 1건 → 기관경고

- 한번에 여러 건을 모아서 조치하는 경우와 한건씩 분리하여 조치(누적가중 가능)하는 경우간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문제 발생

* 예) 기관경고 4건 → (합건) 기관경고, (분리) 영업정지(누적가중)

- **(개선방안)** 기관제재에 대해서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
(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 동일한 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가 일정 건수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

☞ 예시: 기관주의 4건 이상 → 기관경고

기관경고 4건 이상 → 일부 영업정지*

* 정지대상 업무는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 발생 시점 및 영업정지 대상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3) 신규업무 진출 제한문제 개선 ('15.6.25 기 발표, 9월 중 시행)

1)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문제 개선

- (현 황) 기관 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대주주 적격을 3년간 제한하여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 제기

*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

- (개선방안)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카드·신용정보업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제한대상과 기간을 축소

* 보험업감독규정, 여전업인허가지침 등 6개 규정 일괄 변경예고 완료(6.25~8.4)

-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1년간,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3년간 제한

※ 단,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적시 영업정지로의 가중효과는 유지

-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68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또한,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사실이 있더라도 신규업무 진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

2) 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는 문제 개선

- (현 황) 합병시 기존 기관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되어 금융기관이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재 누적가중 적용(검사·제재규정 변경예고 완료(6.10~7.20))

-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도록 함

(1) 금전제재 부과대상 확대

□ (현 황) 현행 금융법 상 금전제재는 개인(신분제재) 또는 기관(영업제재)에 대한 제재에 비해 한정적으로 도입

① 과태료는 대부분 도입(41개 법률 중 33개)되어 있으나, 과징금(9개)과 이행강제금(5개)은 일부 법률에만 도입

* 과태료: 단순 질서위반에 부과(각종 신고·보고의무 위반 등)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징벌(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같은
이행강제금: 보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미이행시 부과

< 주요국 사례 >

- 영국, 미국, 독일: 단일한 금전제재 체계 → 위반행위가 금융시장·소비자에 미친 피해규모 등을 사후에 평가하여 제재금 결정
- 일본: 사전에 법률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분하여 규정

② 금전제재는 법률에 부과사유·부과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과 가능

※ 은행법과 금융지주법에는 포괄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적용사례는 없음
(은행법 §69②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면, 개인(신분제재) 또는 기관(영업제재)에 대한 제재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부과 가능

< 주요국 사례 >

- 영국, 미국: "법령·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
- 독일,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부과사유·부과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

⇒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제재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확대할 필요

□ **개선방안** (관련 법 개정 필요)

- 위반시 제재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금전제재 부과대상을 확대

①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과태료 신설 예시 >

법률	위반 행위	신설 사유
금융지주법	임원·최대주주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상 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위반	내부통제 등에 중요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 등에서 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은행법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위반	이해상충 방지 강화
	이사회 의결시 특별이해관계자의결권 제한 위반	
보험업법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자회사 보유 등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강화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및 여전법상 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저축은행법	임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이해상충 방지 강화 (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등에서 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②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 과징금 신설 예시 >

법률	위반 행위	신설 사유
금융지주법	이사회 결의 없이 대주주에 신용공여	절차적 흠결이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제재
은행법	비업무용 자산 등의 미처분	부당이득 발생 또는 금융질서 문란 소지가 큰 사항
	경영지도기준 준수의무 위반	
	경영공시의무 위반	
	업무범위 제한 위반	
보험업법	잉여금의 분배 위반	현행 과태료에서의 전환
	일반 및 특별계정상 자산운용 관련 법상 비율 위반	
신탁법	조합의 사업 목적 외 자금사용 금지 위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타 법상의 과징금 대상

③ 기관제재 갈음 금전제재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고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 현재 4개법에만 도입되어 있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

* 예) ① 영업정지 기간의 이익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자본시장법)
 ②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전자금융법, 5천만원 한도)

현 행	확대 도입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금융지주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신탁법 등

- 아울러, 피제재기관의 **제재부담 완화**를 위한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 도입**

* 기관경고의 경우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될 수 있고 일정기간 대주주 적격도 상실되어, 신규업무 진출 제한효과 발생

* 예) 기관경고 3회시 영업정지로 가중됨을 고려, 누적가중시 예상되는 영업정지 기간중 이익범위의 1/3을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으로 산정 가능

- ⇒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수단의 다양화 추진**

(2)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1) 과태료

□ (현 황)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축소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 '15.8월말 현재 41개 금융위 소관법 중 33개 법에서 규정

○ 금융기관과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낮을 경우, 금융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질서위반에 대해 제대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대부분 5백만원~5천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편

* 과태료 부과금액('14년 평균): 금융기관 1,230만원, 개인 624만원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가 500만원에 불과

< 주요 금융법의 과태료 부과한도 >

구 분	금융기관	임직원	기타
금융지주법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대주주)
은행법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대주주)
자본시장법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위반)	1천만원, 5천만원 (투자권유대행인 증권발행인 예약자 등)
보험업법	1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보험설계사, 모집인 중개인 보험협회 등)
저축은행법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검사방해, 허위 자료제출·진술 등)	1천만원(저축은행중앙회 등)
여전법	5백만원	-	5백만원(모집인, 수납대행 가맹점 등)
신용정보법	5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임원 겸직제한 위반)	5백만원(추심인) 1천만원(유사명칭 사용금지)
전자금융법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전자화폐 명칭 허위사용자)	-	-
금융실명법	3천만원	3천만원(임직원 양벌 가능)	
신탁법	1천만원	-	1천만원(신탁중앙회)

< 현행 금융법 상 주요 과태료 부과사유 및 부과한도 >

구 분	주요 부과사유	부과대상	부과한도
금융지주법	내부통제기준 미제정	금융기관	5천만원
	경영공시 의무위반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해태 또는 허위보고	금융기관	1천만원
은행법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운영 관련 미신고	금융기관	5천만원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 미보유	금융기관	
	재무제표의 공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임직원	1천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해태 또는 허위보고	임직원	
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미제정	금융기관	5천만원
	경영공시 의무위반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해태 또는 허위보고	금융기관	
	약관제정 또는 변경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금융기관	1천만원
보험업법	경영공시 의무위반	금융기관	5천만원
	겸영업무 제한 위반	금융기관, 이사·감사 등	2천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해태 또는 허위보고	금융기관, 이사·감사 등	
저축은행법	금융거래 계약체결 시 설명의무 불이행	금융기관	5천만원
	경영공시 의무위반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해태 또는 허위보고	금융기관	3천만원
여전법	모집질서 유지관련 의무 위반	금융기관	5백만원
	경영공시 의무위반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해태 또는 허위보고	금융기관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신원 및 이용목적 미확인	금융기관	3천만원
	허가사항 변경 관련 사전 미신고	금융기관	1천만원
	채권추심업무시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	5백만원
전자금융법	유사명칭(전자화폐) 사용금지 의무 위반	전자화폐 명칭 허위사용자	5천만원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의무 위반	금융기관	2천만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 및 보존의무 위반	금융기관	1천만원
금융실명법	거래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	3천만원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위반	금융기관, 임직원	

- 또한, 법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한도가 차이 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

<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 차이(예시) >

구 분	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신정법
임·직원 겸직 금지 의무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위반시 금전 제재 없음	관련 의무 없음	1천만원
임원·최대주주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시 금전 제재 없음	임원: 1천만원 최대주주: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시정조치 명령위반 또는 불이행	5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위반시 금전 제재 없음	1천만원

□ (개선방안) 다음 원칙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추진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원칙 >

- ① 지주·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관 1억원, 개인 5천만원으로 인상

※ 보험업법 개정안 ('14.9.24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보험회사: 5천만원 → 1억원, 임직원 등: 2천만원 → 5천만원

- 다만, 금융질서,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
- ②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 추진
- *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5백만원에 불과 → 3~5천만원 수준으로 인상
- ③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 인상, 신규 부과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예시) >

	부과사유	부과대상	금액인상	비 고
은행법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보고·공시 의무 위반	금융기관	5천만원→1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허위내용 기재시	임직원	1천만원→5천만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강화
자본시장법	금융위의 조치명령 위반시	금융기관	1천만원→5천만원	금융지주법, 은행법상 유사 위반시 5천만원을 부과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5천만원→1억원	보고·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우려되는 투자자 피해 방지
여전법	무자격자에게 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	5백만원→3천만원	중대 위반에 대한 중징계 (보험업법은 유사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바 과징금 전환 검토 가능)
	대주주 거래 관련	금융기관	5백만원→5천만원	대주주 지원 행위 관련 의무 위반시 중징계
신정법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신원과 이용목적 미확인	신용정보 회사	3천만원→1억원	중대 위반에 대한 중징계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임원	1천만원→2천만원	보험업법상 유사위반시 2천만원을 부과

< 추진방안 >

- ① 과태료 부과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33개의 금융 관련법 개정을 일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주요 업권법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 추진 (차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이상 8개법)

- ② 여타 법률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시 원칙**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인상도 병행 검토**하도록 함

2) 과징금

- (현 행) 법정 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 및 조정(납부능력 등 고려)을 거쳐 최종 부과액 결정

$$\boxed{\text{법정 부과한도액 (위반금액} \times \text{부과비율)}} \times \text{기본부과율} \times \boxed{\text{기본과징금}}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징금 부과액}}$$

⇒ 기본과징금을 법정 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로 산정하는데, 타 부처(공정위, 방통위)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

* '14년 과징금 부과실적 (1건당 평균금액, 부과건수)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2.7억원, 70건	71.2억원, 113건	58.3억원, 34건

① 법정 부과한도액은 통상 위반행위 관련 기준금액×부과비율*

* 예)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초과한 신용공여액×10%
보험계약자 등에 특별이익 제공→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20%

※ 다만,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3/100」로 산정

② ①에 기본부과율(7/10~7/160)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

- ①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체감*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드는 효과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 초과)7/160

< 타부처 사례 >

○ 타부처(공정위, 방통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

*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3/100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부과)

(방통위)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3/100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부과)

-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

< 현행 금융법 상 주요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한도 >

구 분	주요 부과사유	부과한도
금융지주법	신용공여한도 초과(동일차주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40%,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40%
	주식 소유제한 위반(비금융사, 자회사 외 계열사 등)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은행법	신용공여한도 초과(동일차주, 자회사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4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신용공여, 주식취득, 타회사 출자지원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40%
	증권·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한도	초과 투자액의 10%
자본시장법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주주 등)	신용공여액의 40%
	각종 공시서류 등의 허위기재·미제출 등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해당가액의 3%~10% (20억원 한도)
	상장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시가총액의 0.001%(5억원 한도)
	시장질서교란행위	부당이득의 1.5배(5억원 미만시 5억원)
	업무정지 같음	업무정지기간의 이익 범위 내
보험업법	신용공여한도 초과(자회사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
	대주주, 자회사와의 거래제한 위반(신용공여, 채권·주식 소유, 자산 매매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초과 소유한 채권주식 장부가액의 20%
	모집광고 준수사항 위반, 모집할 수 없는 자에게 모집 위탁, 특별이익 제공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또는 50%(특별이익 제공)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반, 기재사항 위반, 작성·변경원칙 위반 등	
	설명의무 위반,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	
저축은행법	신용공여한도 초과(개별차주, PF업자 등)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신용공여, 가지급 등)	신용공여 등 금액의 40%
여전법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신용공여)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20%
	업무범위 위반, 자금조달방법 위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의무 위반,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1억원
	신용카드업 업무정지처분 같음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관련 의무 위반	5천만원
신용정보법	개인비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관련 매출액의 3%(50억원 한도)
	개인비밀의 업무 외 누설·이용	관련 매출액의 3%(200억원 한도)
	불법누설된 개인비밀의 제공·이용	
전자금융법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업무외 사용	50억원
	업무정지명령 같음	5천만원
회계사법	회계법인 업무정지처분 같음	5억원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처분 같음	1억원

: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 (개선방안)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

① 법정 부과한도액(기준금액×부과비율) 인상

-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징금을 인상하는 현실적인 대안
-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

* 현행 금융법 상 기준금액이 대체로 합리적이거나 일부 기준금액은 상향
(예: '위반행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은 '수입보험료,
2~3개연도 수입보험료 등'으로 인상)

- 부과비율을 인상(예: 3배 수준)하거나 삭제*

* 중대한 위반은 부과비율 삭제도 검토 (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등)

※ 보험업법 개정안('14.9.24 입법예고)의 과징금 부과비율 10~20%p 인상사례 참고

< 기준금액과 부과비율 인상 예시 >

법 률	위반 행위	기준금액과 부과비율	비 고
금융 지주법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초과	초과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20%→초과한 주식의 장부가액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관련 의무사항 이행 강화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초과한 신용공여액	
은행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30%	건전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소유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30%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 초과	초과 신용공여액의 40%→초과 신용공여액 전부	대주주 관련 의무사항 이행 강화
보험업법	보험계약자 등에 특별이익 제공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 보험료의 50%→수입보험료의 60%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전체 수입보험료로 전환하고, 비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법상 목적을 해칠 수 있는 중대위반에 대한 징벌성 강화
	설명의무,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수입보험료의 30%	
자본 시장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신용공여액의 40% → 신용공여액 전부	대주주 관련 의무사항 이행 강화

②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조정

-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으로 규정
- 기준금액×부과비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부과상한을 인상

< 기준금액과 부과비율 인상 예시 >

법 률	위반 행위	기준금액과 부과비율	비 고
여전법	자금조달방법 위반	1억원 → 위반하여 조달한 자금의 20%	위반하여 조달한 자금규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과징금 부과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	1억원 →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 장부가액의 20%	위반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동일·유사위반시 은행법·저축은행법에서는 장부가액의 10%)
	업무정지 갈음	1억원 → 업무정지 기간의 이익범위 내 또는 10억원	업무정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익규모 반영 (1억원은 과소한 측면)
전자금융법	접근매체 선정과 사용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갈음	5천만원 → 업무정지 기간의 이익범위 내 또는 10억원	업무정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익규모 반영 (5천만원은 과소한 측면)

③ 기본부과율 폐지

- 명확한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부과율을 폐지
-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위반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부과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예: (중대성 弱)×50%~70%, (중대)×70%~85%, (매우 중대)×85%~100%

< 타부처 사례 >

- 타부처(공정위,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평가하여 부과기준율을 적용

* (공정위) 경쟁질서 저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을 점수화
→ (중대성 弱) 0.3~1.5%, (중대) 1.5~2.3%, (매우 중대) 2.3~3%

* (방통위) 시장 왜곡, 피해 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평가
→ (중대성 弱) 1% 이내, (중대) 1~2%, (매우 중대) 2~3%

⇒ 상기 현실화 방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금액이 3~5배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기대

<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

① 현 행

$$\boxed{\text{법정 부과한도액}} \times \text{기본부과율} = \boxed{\text{기본과징금}}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징금 부과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① 법정 부과한도액: 통상 위반 관련 기준금액×부과비율로 산정

법 률	법정 부과한도액
금융지주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5개)	위반 금액 × 부과비율
신용정보법 (1개)	위반 관련 매출액 × 3/100
전자금융거래법,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3개)	정액 * 예: 신용카드업 영업정지 같음: 1억원

② 기본부과율

법정 부과한도액	2억원 이하	2~20억원	20~200억원	200~2,000억원	2,000억원 초과
기본부과율	7/10	7/20	7/40	7/80	7/160

② 개 선

$$\boxed{\text{법정 부과한도액}} \xrightarrow{\text{중대성에 따라 산정}} \boxed{\text{기본과징금}}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징금 부과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① 법정 부과한도액 인상

법 률	법정 부과한도액
금융지주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5개)	부과비율 인상(예: 3배 수준) 또는 삭제
전자금융거래법,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3개)	기준금액×부과비율로 전환 또는 상한 인상

② 기본부과율 폐지

- 위반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부과비율을 차등 적용

* 예: (중대성 弱)×50%~70%, (중대)×70%~85%, (매우 중대)×85%~100%

(3)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 **(현 황)** 법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구 분	금전제재 혼재 사례	
광고방법 및 절차 위반	(은행법·자본시장법) 과태료 (5천만원)	(보험업법) 과징금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
감독기관 검사거부·방해	(은행법·보험업법) 과태료 (5천만원)	(신탁법) 벌금 (2천만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과태료 (5천만원)	(저축은행법·여전법) 벌금 (1천만원)

- **(개선방안)**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금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제재 유형을 재조정

- ① 제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 과태료 - 과징금 전환기준(안) >

구분기준	과 태 료	과 징 금
부당이득 발생여부	단순한 질서 위반으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실회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 하거나 응당 부담했어야 하는 손실을 부당하게 회피한 경우
사회적 피해규모	금융 소비자 및 기타 금융기관 등의 피해범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경우	금융 소비자 및 기타 금융기관 등의 피해범위 및 규모가 크게 발생할 경우
위반규정 중대성	해당 법의 단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의 입법목적을 해칠 수 있는 실체적 규정 위반

<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예시) >

법률명	주요 내용
금융지주법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
은행법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운영 관련 미신고 등
보험업법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공시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모집 관련 금지행위,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자본시장법	경영공시 의무 위반, 부당권유, 판매보수 수수 금지, 성과보수 제한 등
저축은행법	중요사항 고객 설명의무 위반,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
여전법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한 경우,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 ② 비범죄화 차원에서 타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벌금도 과태료·과징금으로 전환

< 벌금을 과태료·과징금으로 전환(예시) >

법률명	현 행	개 선 안
보험업법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시 벌금 1천만원	위반금액 40% 이하 과징금 (비범죄화 및 실질적 제재수단 확보)
저축은행법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벌금 1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현행 은행법은 과태료 5천만원)
신용정보법	지배주주 변경 승인의무 위반시 벌금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유사 위반시 보험업법은 과태료 1천만원)
여전법	중요사항 고객 설명의무 위반시 벌금 3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현행 저축은행법은 과태료 5천만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벌금 1천만원	과태료 5천만원 (현행 은행법은 과태료 5천만원)

(4) 금전제재 부과의 합리성 제고

1) 구체적인 금전제재 부과기준 마련

□ (필요성) 금전제재 활성화, 부과금액 인상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우려

-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금전제재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

□ (개선방안)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 등을 대폭 보강

- 금번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업권에 따라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부과기준 등의 개선내용이 같이 적용되도록 함

* 여전법 시행령,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주요 개선내용 예시 >

- ① 과징금의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3단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 금융시장 왜곡,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의 규모와 범위, 사후 정상화 노력 등을 고려
 - * 예: (중대성 弱)×50%~70%, (중대)×70%~85%, (매우 중대)×85%~100%
- ② 영업정지 기간의 이익규모 산정방안 등 반영
 - 영업정지(기관경고) 같음 과징금 부과시 합리적인 금액 산정을 위하여 영업정지 기간중 예상되는 이익규모 산정방식 제시
 - * 예: 해당 금융기관의 최근 1년간 월평균 매출액 등
- ③ 금전제재 관련 가중·감경제도 합리화
 - 가중·감경사유를 추가하고 위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비율을 조정

2) 금전제재 관련 가중·감경제도 합리화

□ (현 황) 과태료 예정금액 및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가중·감경 가능

- 금전제재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할 필요

□ (개선방안)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 개선방안 예시 >

① 검사 방해 등*에 대해 가중사유 추가(20%까지 가중)

- 현재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시’ 20%까지 감경 가능

- * i) 검사상황 하에서도 위반행위를 고의로 계속하는 경우
- ii) 검사거부, 증거인멸·조작 등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위반행위 장기화 및 반복적 위반에 대한 가중제도 강화

- 현행 2단계 가중(180일 이내 0.1%, 초과 0.2%)을 3단계*로 강화

* 예) 180일 이내 0.1%, 180일 초과~365일 0.2%, 365일 초과 0.4%

- 최근 3년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1회당 20%까지 가중(현행 10%)

③ 자체적 위반 방지노력에 대한 감경 확대

-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시 감경사유 추가(50%까지 감경)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50%까지 감경(현행 20%)

④ 위반행위 적발 前 자발적인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에 대한 감경

- 피해배상 시기 및 금액 규모에 따라 50%까지 감경

(1) 내규 · 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 폐지

□ (현 황) 그간 금융기관 내규 및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관행 존재

-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① 각 금융기관의 내규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한 제재 형평성 저해
 ② 내규에 사실상 법규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 훼손 우려

□ (개선방안)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

- 금융당국은 내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지 않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 (외부통제 → 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큰 틀을 전환, '15.8.20 기발표)
-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 (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 행정지도에 대한 검사·제재 등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화
 - 금감원 검사결과 중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이행부진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삭제(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2)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 (현 황) 그동안의 검사·제재는 책임 규명, 제재 위주로 운용되어 문제점 시정, 취약점 개선 측면은 미흡

○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 법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

< 확약서·양해각서 비교 >

구 분	체결사유	체결절차	근거규정
확약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점 개선	담당 임원 또는 대표자가 제출	검사·제재규정 제20조의2 제1항
양해각서	금융기관의 경영상 심각한 취약점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이행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	동조 제2항

□ (개선방안)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사유를 확대

○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 ①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어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등
② 행위 당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반에 대한 인식없이 행해진 경우

○ 법규위반에 관한 확약서·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가중 사유로 감안하여 제재수위 상향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필요)

* 美 FDIC는 MOU 진행중 경영진의 시정 의지가 없을 경우 제재

(3) 금전제재 금감원 일부 위탁

□ (배 경) 개인·기관제재는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금전제재는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징수

- 금융위/원 간 협력 강화 및 제재업무의 효율성, 제재대상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금전제재 업무의 일부 위탁 추진

□ (위탁방안)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되, 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

① 과태료: 금감원에 위탁

- ① 단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②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고 재량이 비교적 제한되어 금감원에 위탁 가능

* 다만, 저축은행법상 감독원장에 대한 과태료 등 위탁하기 곤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금융위에서 의결

② 과징금: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

- 과징금은 ①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목적 등으로 부과되며, ② 금융위 소관 제재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

* 다만,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 도입시 기관경고가 금감원 소관임을 감안하여 금감원에 부과권한을 부여

※ 최근 3년간 금전제재의 건수 91.8%, 금액 20.3%의 위탁 효과 발생

< 과태료 - 과징금 비교 >

구 분	과 태 료	과 징 금
부과목적	○ 직접적 행정목적 침해가 아닌 경미한 의무위반에 부과	○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목적
부과금액 ('12~'14년)	○ 1건당 평균 6.3백만원	○ 1건당 평균 2.8억원
부과절차	○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 ○ 단순반복적 소액 과태료는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	○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

□ 기대효과 및 보완방안

- 그간 소액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관련 안건을 금융위에서 처리함에 따라 제재절차가 장기화(약 3주 추가소요)

⇒ 금감원 위탁시 과태료 관련 절차의 신속성이 제고되고, 제재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제재업무의 효율성이 개선

- ①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고,
- ②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① '14년중 금융위 안건 381건 중 과태료 안건이 60건(15.7%)을 차지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② 금융실명법, 외환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위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되던 단순반복적인 소액 과태료 부과 업무(연간 600여건)도 금감원 위탁

- 그러나, 금감원에서 과태료가 결정되고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금융위 상정시 추가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 가능

⇒ 이러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 ① 제재심 과정에서 반론권 행사* 등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

* 과태료 부과 대상여부를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통보, 사전통지를 구체적으로 실시, 제재심 안건 등의 열람권 보장, 공정한 발언기회 보장

- ②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예: 매분기말)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

(4)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 ('15.6.25 기발표, 9월중 시행)

- **(현 황)**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심의결과가 조치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현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
- **(개선방안)** 제재대상자가 수검종료 후 제재심 및 금융위 등의 참석에 이르기까지 반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
 - ① **(제재심 부의사실 통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
 - ② **(사전통지)** 사전통지시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
 - ③ **(제재심의 관련 안전 열람)** 제재심 및 금융위 등의 안전 및 참고자료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한 열람권 보장
 - * 단, 금융시장 안정, 수사의 밀행성 보장,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 등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④ **(공정한 발언기회 보장)** 제재심 및 금융위 등의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

⇒ 향후 금전제재 활성화(금감원 금전제재 권한 일부 위탁 포함)시 부과 절차 등에 있어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

Ⅳ. 향후 추진계획

세부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기
1. 개인 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자율처리 대상 및 적용권역 확대	검사·제재세칙 개정	'15.12월
자율처리 결과 미흡시 책임자 징계 폐지	검사·제재규정 개정	'15.9월
자율처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점검 개선	-	즉시 시행
제재시효제도 도입	행정지도 시행/ 관련 법령 개정	'15.12월/ 차기국회 제출
임원 책임규명 강화	-	즉시 시행
기관 위반행위 관련시 임원 제재 적극 병행	-	즉시 시행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합산	검사·제재규정 개정	'15.12월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검사·제재규정 개정	'15.12월
2. 기관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관의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위반은 기관만 제재	-	즉시 시행
내부통제 수준을 기관제재 양정시 반영	검사·제재세칙 개정	'15.12월
단기·일부 영업정지 활용 확대	-	즉시 시행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검사·제재규정 개정	'15.12월
신규업무 진출 제한 문제 개선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15.9월
3. 금전 제재 활성화		
금전제재 부과대상 확대	관련법 개정	차기국회 제출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관련 법령 개정 / 검사·제재규정 개정	차기국회 제출 /'15.12월
금전제재의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검사·제재규정 개정	'15.12월
과징금 관련 가중·감경제도 합리화	검사·제재규정 개정	'15.12월
4. 제재시스템 개선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 폐지	검사·제재규정 및 同 세칙 개정	즉시시행/ '15.12월
법규위반 관련 필요시 활약서·양해각서 체결 (미이행시 제재수준 가중)	검사·제재규정 / 同 세칙 개정	'15.12월
금전제재 부과권한 일부 위탁	관련 법령 개정 / 관련 고시 개정	차기국회 제출 /법 통과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 (장기적으로 추가 검토)	검사·제재규정 / 同 세칙 개정	'15.9월

참고 1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효과 관련 가상사례 구성

① 보험업법상 ①설명의무 위반 및 ② 모집광고 준수 위반 관련

① 설명의무 위반 과징금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00원 -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00원 -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② 부과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000원 - 100,000,000원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00원 - 100,000,000원 × 50%
④ 기본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0(2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0,000원 - 20,000,000원 ×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500,000원 - 50,000,000원 × 85%(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000,000원(약 3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② 부당광고 관련 과징금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7,000,000,000원 - 부당광고 관련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7,000,000,000원 - 부당광고 관련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② 부과비율	20%	5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1,400,000,000원 - 7,000,000,000원 × 20%	3,500,000,000원 - 7,000,000,000원 × <u>50%</u>
④ 기본 부과율	7/10 (2억 이하), 7/20 (2억 초과 20억미만)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560,000,000원 - 2억원 × 7/10 + 12억원 × 7/20	2,975,000,000원 - 3,500,000,000원 × <u>85%</u> (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560,000,000원	2,975,000,000원(약 5.3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②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관련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 200,000,000원 -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 200,000,000원 -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②	부과비율	▪ 20%	▪ 5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 40,000,000원 - 200,000,000원 × 20%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u>50%</u>
④	기본 부과율	▪ 7/10 (2억원 이하)	▪ 없음 - <u>기본부과율 폐지</u>
⑤	기본 과징금 (③×④)	▪ 28,000,000원 - 40,000,000원 × 7/10	▪ 85,000,000원 - 100,000,000원 × <u>85%</u> (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 (+) 2,800,000원 -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처분 사실 있을시 10% 가중	▪ (+) 8,500,000원 -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처분 사실 있을시 10% 가중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 30,000,000원	▪ 93,000,000원(약 3.1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③ 상호저축은행법上 ①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및
②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관련

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관련 과징금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00,000원 - 신용공여 초과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00,000원 - 신용공여 초과 금액
② 부과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0,000원 - 2,000,000,000원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00,000원 - 2,000,000,000원 × 30%
④ 기본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 위반당시 시행령에는 법정한도액 50%이상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00원 - 200,000,000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0,000,000원 - 600,000,000원 × 85%(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0,000,000원(약 5.1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②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관련 과징금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3,000,000,000원 - 신용공여 초과 금액	3,000,000,000원 - 신용공여 초과 금액
②	부과비율	10%	3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300,000,000원 - 3,000,000,000원 × 10%	900,000,000원 - 3,000,000,000원 × 30%
④	기본 부과율	50% - 위반당시 시행령에는 법정한도액 50%이상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명시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150,000,000원 - 300,000,000원 × 50%	765,000,000원 - 900,000,000원 × 85%(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150,000,000원	765,000,000원(약 5.1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④ 여신전문금융업법上 대출업무 영위기준 위반 관련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000원 - 영위기준 위반하여 대출한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000원 - 영위기준 위반하여 대출한 자금
② 부과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③ 법정부과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0,000원
④ 기본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 법정부과한도액이 정액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0,000,000원 - 400,000,000원 × <u>85%(중대위반 가정)</u>
⑥ 가중·감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⑦ 최종 결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0,000,000원(약 3.4배 상향)

⑤ 자본시장법上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 2,500,000,000원 - MAX[거짓기재 제출일 전후 15일거래 일간 일평균거래금액, 10억원]	▪ 2,500,000,000원 - MAX[거짓기재 제출일 전후 15일거래 일간 일평균거래금액, 10억원]
②	부과비율	▪ 10%	▪ 30%
③	법정부과 한도액	▪ 66,874,508원 - MIN[직전사업연도 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 200,623,524원 - MIN[직전사업연도 일평균거래금액의 <u>30%</u> , 20억원]
④	기본 부과율	▪ 0.6%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를 고려 하여 부과율 산정에 既반영	▪ 2.0% - 부과율 상향
⑤	기본 과징금 (①×④)	▪ 15,000,000원 - 2,500,000,000원 × 0.6%	▪ 50,000,000원 - 2,500,000,000원 × 2.0%
⑥	가중·감경· 조정	▪ (-) 7,500,000원 - 거래소 공시 50% 감면	▪ (-) 10,000,000원 - 거래소 공시 <u>20%</u> 감면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 7,500,000원	▪ 40,000,000원 (5.3배 상향)

⑥ 은행법상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 위반 관련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 4,000,000,000원 - 위반기간 중 최고금액	▪ 4,000,000,000원 - 위반기간 중 최고금액
②	부과비율	▪ 10%	▪ 3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 400,000,000원 - 4,000,000,000원 × 10%	▪ 1,200,000,000원 - 4,000,000,000원 × 30%
④	기본 부과율	▪ 7/10 (10억원 이하), 7/2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 175,000,000원 - 10억원 × 7/10 × 10% + 30억원 × 7/20 × 10%	▪ 1,020,000,000원 - 1,200,000,000원 × 85% (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 (+) 7,605,704원 - 위반행위의 기간 49일 × 일평균 위반 금액에 따른 기본과징금(1.55억원) × 0.1% ▪ (-) 52,500,000원 - 자체시정(30% 감경사유)	▪ (+) 42,917,987원 - 위반행위의 기간 49일 × 일평균 위반 금액에 따른 기본과징금(8.8억원) × 0.1% ▪ (-) 306,000,000원 - 자체시정(30% 감경사유)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 130,000,000원	▪ 756,000,000원(약 5.8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7 금융지주회사법上 ①신용공여 위반 및
②소속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 관련

①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 200,000,000원 - 위반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	▪ 200,000,000원 - 위반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
②	부과비율	▪ 10%	▪ 3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 20,000,000원 - 200,000,000원 × 10%	▪ 60,000,000원 - 200,000,000원 × <u>30%</u>
④	기본 부과율	▪ 7/10 (10억원 이하)	▪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 14,000,000원 - 20,000,000원 × 70%	▪ 51,000,000원 - 60,000,000원 × <u>85%</u> (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 (+) 454,732원 - 위반행위기간 2일 이상 ▪ (-) 7,000,000원 - 금융사의 손실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동기 등 고려시 법규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 감경	▪ (+) 454,732원 - 위반행위기간 2일 이상 ※ 일평균위반액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과징금 동일 가정 ▪ (-) 10,200,000원 - 감경수준 50% → <u>20% 조정</u>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 7,000,000원	▪ 41,000,000원(약 5.9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② 소속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 과징금

구 분		현 행	산정체계 개편시
①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0,000원 - 위반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0,000원 - 위반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
②	부과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③	법정부과 한도액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000원 - 5,000,000,000원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000,000원 - 5,000,000,000원 × 30%
④	기본 부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0(10억원 이하), 7/20(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기본부과율 폐지
⑤	기본 과징금 (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000,000원 - 10억원 × 0.1 × 70% + 40억원 × 0.1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5,000,000원 - 1,500,000,000원 × 85%(중대위반 가정)
⑥	가중·감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47,062,445원 - 위반행위기간 2일 이상(위반일489일) ▪ (-) 105,000,000원 - 금융사의 손실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동기 등 고려시 법규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1,606,869원 - 위반행위 기간 365일 초과시 0.2% → 0.4% 가중 강화 ※ 일평균위반액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과징금 동일 가정 ▪ (-) 255,000,000원 - 감경수준 50% → 20% 조정
⑦	최종 결정금액* (⑤±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1,000,000원(약 7.1배 상향)

* 100만원 미만 절사

참고 2

국가별 주요 금전제재 부과사례

	연도	부과대상	부과액	위반행위
미국 (FRB, SEC, CFTC OCC)	2012	UBS	\$7억	Libor 금리 조작
	2013	JPMorgan	\$7억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2014	BNP paribas*	\$5.1억	수단, 이란 등 제재대상국과 자금거래
	2012	HSBC Bank	\$5억	메이도프 사건관련 자금세탁 방지규정 위반
	2013	Rabobank	\$4.8억	Libor 금리 조작
영국 (FSA, FCA)	2012	UBS	£ 1.6억	Libor 금리 조작
	2013	JPMorgan Chase	£ 1.4억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2014	Lloyds Banking Group	£ 1.1억	Repo 및 Libor 금리 조작
	2013	Rabobank	£ 1.1억	Libor 금리 조작
	2011	RBS	£ 0.9억	Libor 금리 조작
	2014	HomeServe Membership Ltd	£ 0.3억	내부통제 프로그램 운영문제 등
한국 (금융위)	2013	경남제일저축은행	67억원	신용공여한도 위반
	2012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2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2013	신안저축은행	19억원	신용공여한도 위반
	2014	골든브릿지캐피탈	12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2014	농협생명	10억원	보험상품 부당광고

* BNP paribas에 대한 총 부과금액 \$89.7억(OFAC, Department of Justice 등)